

문서번호	감사담당관-1540
결재일자	2016.2.2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125호

주 무 관	감 사 팀 장	감 사 담 당 관	부 구 청 장
손우현	이상성	구승희	02/23 代오영수
협 조			

「부패 제로, 청렴동작 구현을 위한」

공 직 기 강 확 립 추 진 계 획



감 사 담 당 관

「부패 제로, 청렴동작 구현」을 위한

공 직 기 강 확 립 추 진 계 획

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자의 선거 개입 방지 및 정치적 중립을 집중 감찰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엄정 조치하며, 소속 공무원의 근무실태, 행동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한 대·내외적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동작을 구현하고자 함

I 추진방향 및 목표

□ 추진 방향

- 4·13 선거 대비 공직자 선거개입 집중 감찰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
- 기본에 충실한 공직자상 확립을 통해 국정 신뢰도 제고
- 국민 불편사항 해소 현장점검 강화 및 비상사태 대응능력 향상
- 적극적인 민원응대를 통해 국민체감 민원해결

□ 추진목표 및 전략

국민에게 신뢰받는 「청렴동작」 구현

추진 전략

□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

⇒ 4·13 총선대비 특별점검, 공직기강 감찰활동 상시 운영, 동향보고·수집 활동 강화 등

□ 기본적 공직윤리 강화

⇒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,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, 초과근무 운영실태 점검 강화 등

□ 국민생활 안전 확보 및 불편 해소

⇒ 사전예방 기획순찰 강화, 순찰 사각지대 최소화, 비상사태 대응능력 점검 등

□ 국민체감 민원해결

⇒ 장기·집단 민원 중점해결, 도돌이표 민원차단 등

II

세부 추진계획

1.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

- ❖ 4·13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등 공직기강 감찰 강화
- ❖ 금품수수, 공금횡령 등 공직비리 발본색원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
- ❖ 원활한 조직 운영 및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

4.13 총선 대비 공직기강 확립

□ 선거개입 NO! 「공직자 특별 감찰반」 확대 운영

- 인 원 : 총 5개 반 25명(상시 직무감찰반 4개 반 8명)
- 감찰반 : 감사담당관 직원
- 내 용 : 4·13 국회의원선거 공무원 개입 차단 중점
 - 특정 후보에게 줄서기, 행정기밀 유출 등 공무원 정치적 중립 훼손
 - 이권 개입, 특혜성 인·허가,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 행사
 - 봐주기식 민원 처리 특혜 부여 및 무단 이석 등 공직 기강 해이 사례
- 방 법 : 요일별, 권역별(사당권, 흑석권, 상도권, 대방권, 신대방권) 순회 감찰

5대 중점 감찰 유형

- ◆ 선거개입 : 행정기밀 유출, 선거캠프 방문, 선거 활동 기획 관여 등
- ◆ 주민불편방치 : 민원 부당 지연, 불법 선거 현수막 등 불법·무질서 행태 방치
- ◆ 안전대책소홀 : 재난대책반 운영 등 비상근무 소홀
- ◆ 복무기강해이 : 무단 이석, 사적 용무 출장, 출·퇴근 시간 미준수 등
- ◆ 선심성 행정 : 특정 사회단체에 보조금 편법 지원, 소모성 예산 집행 등

□ 직원회의 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준수 교육 의무화

- 부서(동)별 각종 직원회의, 교육 시 선거중립 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
- 선거 개입 유형 및 비리 사례 전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교육

공무원 선거범죄 처벌 관련 법률

◆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죄(공직선거법, '14. 2. 13. 시행)

- 제85조(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)제①항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- 제255조(부정선거운동죄)제⑤항 법 제85조제①항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268조(공소시효)제③항 공무원(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제외)이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한다.

◆ 정치운동금지 위반 처벌 강화(지방공무원법, '14. 2. 7. 시행)

- 제82조(정치 운동죄)제①항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제②항 제①항에 규정된 죄의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.

공직기강 감찰 활동 강화

□ 추진 개요

- 추진시기 : 연 중
- 감찰반 구성운영 : 감사담당관 4개반 8명(2인 1조)
※ 상황에 따른 비노출 암행감찰 운영
- 대 상 : 전부서(동), 산하기관(동작구시설관리공단 등)
- 감찰방법
 - 취약부서 및 직원, 업무에 대한 집중감찰
 - 무사안일, 복지부동 행태 등 업무 불성실 및 부당행위 중점감찰
 - 동향보고 활성화 및 수집활동 강화를 통한 실시간 동향 파악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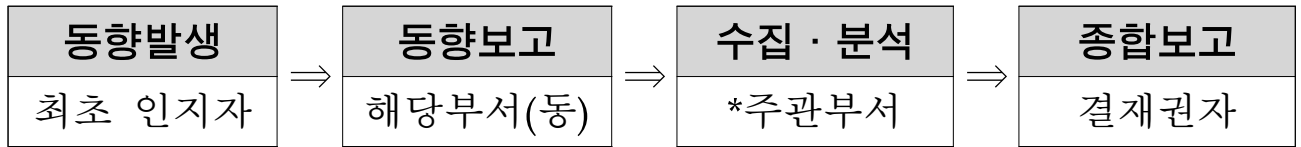
□ 중점 감찰사항

- 현금·상품권·선물 등 금품수수 행위
- 직무관련 향응수수 등 불법행위 및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
- 공무상 취득한 기물누설 행위
- 근무시간중 유기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등

동향 보고·수집 활동 강화 및 보고체계 확립

□ 추진 개요

- 추진기간 : 연 중
- 대 상 : 전부서(동)
- 보고시기 : 사건·사고 징후 또는 발생 인지 즉시
- 보고절차



※ 주관부서 : 동향담당부서(감사담당관, 행정지원과) 및 소관부서
모든 동향은 감사담당관 우선 보고

□ 주요 보고내용

- 감사원, 국무총리실, 검·경찰 등 외부 사정기관 동향파악 신속 보고
-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사실, 외부기관 수사·감사 동향
- 주요사업 추진 및 주요행사 진행 관련 동향
- 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, 각종 사건·사고 등

□ 동향보고 시 유의사항

- 육하원칙에 의거 사건·사고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보고
 - 사안의 경·중을 떠나 특이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고
 - 동향보고는 신속·정확·간결성이 매우 중요함
 - 현장 상황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현장사진 첨부
 -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
 -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 또는 사업의 경우 초동·중간·결과 구분보고
- ※ 직원 비위행위 등 주요사안에 대한 동향 미보고시 구청장 지시사항 미이행, 직무상 의무 위반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정에 의거 엄정 조치

2. 기본적 공직윤리 강화

- ❖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생활화로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
- ❖ 외부강의 신고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등으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
- ❖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복무규정 준수

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강화

□ 점 검 개 요

- 추진시기 : 연 중(월 1회 이상)
- 대 상 : 전 직원
- 점검방법 : 월별 테마 선정, 유관부서 협조 점검 실시
 - 청백-e 시스템 및 통합자금관리 등을 통한 법인카드 사용현황 주기적 점검
 - 초과근무, 여비 등 수당지급 적정여부 : 행정지원과, 재무과
 - 업무용PC 이용 적정여부 : 홍보전산과

□ 주요 점검내용

- 직무 관련성 및 수수금액과 상관없이 금품·향응 수수 여부
-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적정여부
- 업무용PC의 적정사용 여부 및 업무용차량 관리실태 등
- 초과근무수당, 급량비 등 각종 수당 지급 적정여부 등

주민신고 및 자율적 내부통제

□ 공직자부조리 신고사이트 상시운영

- 신고대상 : 공무원의 금품요구 및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주민제보
- 운영방법
 - 단순 생활불편민원은 해당부서 지정하여 검토 후 답변처리
 - 금품요구 등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민원은 감사담당관에서 조사 검토 후 관련규정에 따라 적의조치

□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

- 추진시기 : 연 중
- 대 상 : IT기반 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계층의 전문성 부족 및 관리체계의 허점을 악용한 공금횡령 등 비리 발생 부분
- 방 법 : 청백-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실시, 자기진단제도 운영 등
- 내 용 : 실무자, 관리자, 감사자 3단계 시스템적 사전 비리 예방
- 세부추진내용
 - 청백-e 시스템 운영 :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상호 자료를 대사하여 불일치 확인
 - 자기진단제도 운영 : 업무별 비리발생 사례를 발굴·보급, 공무원 스스로 사전 진단 의무화
 -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: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 활동 관리 및 항목별 점수화하여 개인별·부서별 평가

건전한 공직풍토 조성

□ 점 검 개 요

- 추진시기 : 연 중(월 1회 이상)
- 대 상 : 전 직원
- 점검방법 : 테마 선정, 유관부서 협조 점검 실시
 - 외부강의 관련 겸직업무 신고여부 : 행정지원과

□ 주요 점검내용

- 외부강의, 세미나, 공청회, 발표회 등 유료 외부강의 시 신고여부
- 외부강의 신고·처리 실적 및 위반사항 적출
 - ※ 미신고 외부강의 적발 시 엄중조치
- 직무관련자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이행여부
- 밸런타인데이, 빼빼로데이 등 상업적 '데이마케팅' 지나친 선물자제

복무실태 점검 강화

추진 개요

- 추진시기 : 연 중(불시점검)
- 대 상 : 전 직원
- 방 법 : 행정지원과 합동 점검

주요 점검사항

- 정시 출·퇴근 및 중식시간 엄수, 무계결근 여부
- 초과근무 신청·명령의 적정성(업무와 상관없이 형식적 명령) 여부
- 초과근무 중 정위치 근무 여부 및 석식시간 준수여부
- 초과근무 중 음주행위 및 사적 업무 시 지문인식 행위 등
- 근무시간 중 사적인 이유로 자리 공백 유무

3. 구민생활 안전 확보 및 불편 해소

- ❖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 중심의 현장행정 강화
- ❖ 순찰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구현
- ❖ 집중호우 등 비상사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 제고

안전 취약요소 사전점검

시기·테마별 기획순찰 강화

- 내 용 : 시기별·계절별, 취약분야 선정 월 1회 이상 현장점검
- 참 여 자 : 감사담당관, 사안별 간부합동순찰 병행
 - ※ 전문지식을 요하는 취약분야, 신규 위험시설물 등은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
- 추진방법
 - 월별 지정계획을 기본으로 하되, 현안 사항에 따라 탄력적 운영
 - 적출 위주의 점검은 지양하고 사전예방 유도를 위한 점검 계획의 사전공개
 - 점검결과의 철저한 분석 및 조치결과 사후점검으로 효과성 극대화

□ 사전예방 기획순찰 강화

- 내 용 : 건설공사 주요공종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
- 운영방법
 - 점검주기 : 연중 수시(주요공종 작업시)
 - 점검대상 : 3억원 이상 건설공사(안전분야 일상감사 대상)
 - 참 여 자 : 감사담당관, 외부전문가(구민참여감사관 등) 합동점검
 - 점검내용 : 터파기,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장 주요공종 부분 안전관리 실태

□ 순찰 사각지대 최소화

- 내 용 : 야간 안전 취약지역 선정, 분기 1회 야간순찰 실시
- 순찰대상 : 주택밀집 지역, 대학·학원가 주변,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
- 참 여 자 : 감사담당관
- 중점 점검사항
 - 안전취약 지역 방범용 CCTV, 보안등, SOS비상벨 점검 및 필요지역 발굴
 - 가로등·보안등 고장, 보도 파손, 적치물 방치 등 야간 보행자 불편사항 적출
 - 기타 주민 불편사항 및 안전 위해요소 적출

비상사태 대응능력 점검

□ 추진 개요

- 추진시기 : 명절연휴, 하계휴가, 인사발령 후, 기타 비상사태 시
- 점검대상 : 전 직원
- 점검방법
 - 동보장치를 이용, 직원 핸드폰으로 음성메시지 전송
 - 가상메시지를 전달하여 응소 여부 및 시간 점검
- 점검결과 후속조치
 - 무응답자에 원인분석 및 문제점 해소방안 강구(응소방법 안내 등)
 -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을 통한 상시 대응체계 확립

□ 주요 점검사항

- 재난 관리부서 비상사태 대비 실태점검
 -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응소태세, 조치사항 등 점검
 - 특히, 폭설 및 폭우 등 재난대비 대응실태 중점 점검
- 간부직 공무원(5급 이상) 비상응소 태세 점검
 -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및 비상응소 태세 점검

4. 구민체감 민원해결

- ❖ 고질·장기적 다수인 민원변질 방지를 위한 집단민원 해결노력 강화
- ❖ 현장 방문을 통한 불편사항 사전파악으로 일상생활 주민불편 최소화
- ❖ 도돌이표 민원차단 등 소극적인 민원처리 행태 개선

고질·장기민원 최소화

□ 장기집단민원 중점해결

- 다수인민원이 집단행동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「민원 조정위원회」 등 운영 활성화
- 외부민간전문가 협력으로 창의적 대안제시, 관계기관 설득, 현장조정 활성화 등

□ 주민불편 발굴 및 민원발생 사전 방지

- 「현장톡톡」 지속적 실시에 따라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미연에 파악하여 민원발생 최소화
- 민원인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‘구청장에게 바란다’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에 대한 성실하고 철저한 답변 및 안내

민원응대 철저

□ 도돌이표 민원 차단

- 다수부서 관련민원 효과적 처리, 핑퐁으로 민원해결지연 시 엄중문책
- 동일·반복 민원 관련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

※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' 16. 2. 1. 시행)

■ **고충민원 처리의 내실화(제17조)**

- 1)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고,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함.
- 2)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,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.
- 3) 민원인이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·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

□ **적극행정 장려, 소극행정 근절**

- 성실·능동적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징계감경
 - 부작위·직무태만으로 주민피해 시 반드시 징계
- ※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예정('16. 4월)

Ⅲ **행 정 사 항**

□ **공직기강 확립 및 행동강령 준수**

- 부서(동)장 솔선수범을 통한 소속직원 공직기강 확립 및 행동강령 준수 철저
 -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사항 적발시 징계의 감경규정 배제
- 특히,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 문책

□ **동향보고 철저**

- 사안의 경·중을 떠나 특이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고
 - 긴급 동향 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
 - 보고체계 확립
- 동향인지 부서(동) → 감사담당관, 행정지원과, 자치행정과, 소관부서
- ※ 모든 동향은 감사담당관 우선 보고

□ **부서(동)별 비상연락망 정비 철저**

- 인사발령 및 개인별 연락처 변동에 따른 수정사항 즉시 반영, 상시 응소가능한 비상연락체계 확립